

“광주도시철도 2호선 출입구 평균 1.9개 불과”

김점기 시의원 “사고때 대피 어려워...국토부와 협의해 늘려야”
정무창 시의원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달 착공식은 보여주기 행사”

광주도시철도 2호선 일부 역의 출입구가 단 1곳만 설치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공식을 열면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일 광주시의회 김점기(민주·남구 2) 의원에 따르면 3단계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역사는 모두 44개다. 실시설계가 끝난 1단계 구간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 사이의 역사는 모두 20개지만 출입구는 총 37개로 평균 1.9개꼴이

다.

특히 시청역과 상무역은 출입구가 도로 중앙에 들어서는 1개뿐이다. 출입구가 3곳인 역사는 1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2곳이다.

2단계(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는 설계 중이며, 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모두 20개 역사에 92개의 출입구가 있어 평균 4.6개꼴이다.

김점기 의원은 “2호선은 출·퇴근 시 최

대 200명 이상이 이용할 예정인데,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매우 적어 대형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와 총사업비 관련 협의 중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출입구 추가 개설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경전철 특성상 출입구와 대합실을 공유하게 설계돼 있어 화재 및 지진 등을 대비한 시뮬레이션 결과 40초~1분 이내에 대피 가능해 법적기준 4분을 충족하는 안전한 설계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역사 출입구 확충 문제는 향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무창 시의원(민주·광산2)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결산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되지 않았는데 6월에 착공식

을 진행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는 애초 4월 말이면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마무리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6월 말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총사업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민들에게 ‘연내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홍보하기 위해 착공식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올해 6월 착공식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당시 2조579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를 2조1925억 원으로 상당 요구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증액분에 대한 기술검토 등으로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영록지사 ‘한빛원전 정지’ 대책 마련 강력 촉구

한수원측 상황 보고 받아

김영록 전남지사는 ‘한빛원전 수동 정지’와 관련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한수원측 원자력에 강력 촉구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3일 오후 집무실에서 전취수 한수원측원자력 기술총괄부사장, 석기영 한빛원자력 본부장 등을 만나 사고 상황과 현재까지 조치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그동안 발생했던 크고 작은 여러 건의 사고가 그랬듯 무사안일과 무책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예견된 인재라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광군민과 도민,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이러한 극심한 국민적 불신

과 지탄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그 결과 공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처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대책 강구 ▲광역지자체의 원전 감시체계 참여 등을 촉구했다.

현재 방사는 누출 시 주민 보호 조치와 관련한 책임만 사도에 있을 뿐, 안전관리 등 사고 이전의 모든 사전 조치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한수원측의 상황보고는 한빛 원전 사고를 도민 안전에 큰 위협으로 판단한 김 지사의 요구로 이뤄졌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공기업 인사기록카드 신상정보 삭제

광주 지방공기업들의 인사기록 카드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대부분 삭제될 전망이다.

4일 광주시와 교육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 인공물부즈맨은 최근 시민모임에 보낸 진정서건 통지서에서 “지방공기업 인사기록 카드의 인권침해 요소를 자발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2017년 8월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읍부즈맨에 제출했다.

당시 광주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등 인사기록 카드

에는 학력 사항, 신체, 가족관계, 재산, 병역사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민감한 개인 신상정보가 적혀 관리되고 있었다.

이런 정보는 인권적 문제뿐 아니라 보직 이동, 승진, 근무 평정 등 인사 관리가 피상적 평판이나 인사관리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게 할 수 있어 직무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경향과 충돌한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인권 친화적인 인사기록 카드는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이 강화된 인사 관리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인사 원칙이 공식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리·달이 들고 파이팅” 광주수영대회 홍보 캠페인
4일 광주시 서구 염주 종합체육관 내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 캠페인에서 이날 연 국무총리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영택 수영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이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서 오늘 ‘100년 토론광장’ 열린다

3·1운동, 임시정부수립 가치 공유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 비전 도출

5일 아시아문화전당서 ‘100년 토론광장’ 열린다.
광주시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홀(2층)에서 ‘100년 토론광장’을 개최한다.

‘100년 토론광장’은 3·1운동과 임시정

부 수립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국민참여 행사다.

“민국 100년, 선열이 꿈꾼나라, 우리가 만들세상!”이라는 주제로 호남·제주권,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 총 5개 권역에서 열린다.

호남·제주권역 토론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청소년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우리가 계승해야 할 100주년의 가치에 대해 공감토크를 하고, 2부에서는 공감토크의 결과를 담아 대한민국 미래 백년의 비전을 도출한 ‘100년 토론광장 선언문’을 만들 예정이다.

강영숙 광주시 총무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미래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계승해야 할 가치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100년, 우리가 만들 세상을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거래 의심업소 단속

분양권 불법거래·다운계약 활용
분양가 상승 예방 목적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분양사무소와 불법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외부 작전세력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 폼다방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시장 동향과 거래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분양사무소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문을 연 화정동 현대아

파트(I PARK)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매일 현지에서 불법거래 행위 단속과 함께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 앞으로 문을 여는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불법 의심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 홍보도 할 계획이다.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공인중개사 대상 예방 교육을 연 4회로 확대하고 교육 장소도 자치구별로 정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청약통장 불법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제언받거나 확인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시·구 누리집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